

두 번째尹 탄핵소추안 14일 표결

민주, 탄핵안 오늘 밤의... 탄핵 찬성국힘 의원 현재 5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11일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 탄핵뿐이라며 여당을 향해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모두 5명으로 가결까지는 3표가 부족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으로도 유일한 길이란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고조될 것"이라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잡이에만 협안인 집단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경제·외교·안보·국력 등 모든 분야에서 입게 될 중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락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조약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12일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섰다.

당초 이날 오후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성안 작업이 길어지며 발의 일정은 12일로 늦춰졌다. 본회의 개의 전에 발의하면 본회의의 보고와 표결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위낙 정리할 새로운 사안이 많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는 내일(12일)로 미뤄졌다"며 "본회의 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한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소추안에 적시했다.

특히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까지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령 해제요구를 막으려고 한 건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탄핵안엔 특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날까지 여당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뉴스

"尹 탄핵, 피할 수 없는 길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합헌적 권한대행 바로 세워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적 위기라는 민중의 파괴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

고 있다"며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력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뉴스

"尹, 즉각 하야·국힘, 탄핵소추안 가결하라" |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성명 발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청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인해 탄핵이 무산된 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수선한 정국에 나이 어린 고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의 시위와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1,350개 교회와 20만 성도를 대표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회장 박종숙 중부교회 목사) 회원들이 11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중부교회 박종숙 목사를 비롯한 회원 28명은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고 목청을 높여 주장했다.

회원들을 대표해 박종숙 목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다"며,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왔음을 깨닫고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민들의 피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참담한 군부독재로의 회귀 시도였다"며, "시민들과 재외교회의 저항으로 이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증시 폭락, 환율 폭등, 국가 브랜드의 심각한 훼손, 안보 불안, 경제 충격, 외교적 고립 등 국가와 국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종숙 목사와 임원들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민에게 끼친 유무형의 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법과 질서를 되찾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12월 7일 탄핵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불성립이라는 기가 막힌 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당분간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것은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삶에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정파적 이익만을 꾀하려는 위헌적이고 반국가적이며 파렴치한 태도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박 목사는 "이에 전주시 기독교 연

합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히고 불순한 의도로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추상같은 부름에 응답해 표결에 참여하고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하라"고 하며, "모든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중부교회 박종숙 목사와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 마전교회 추이업 목사, 새전교회 김복철 목사, 한동교회 김동하 목사, 시

전교회 정인 목사,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 인선협 교회 백남운 목사,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 새벽을 여는교회 최은 목사, 사랑하는 교회 이상규 목사, 부안침례교회 김복철 목사, 함께하는 교회 오명현 목사, 주 함께 하는 교회 이대근 목사, 풍성한 교회 홍대규 목사, 임마누엘 교회 박철 장로, 신일교회 김진욱 장로와 최동규 장로, 안대목교회 추원호 장로, 바울교회 김수열 장로, 여성분과장 유나영 권사, 원월도 교회 나춘근 장로(순위 무순)와 그의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힘을 보탤다.

지극히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의 이번 시국 관련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만호 기자

12·3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경찰 국수본, 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잡아

경찰의 비상계엄 사태(12·3사태) 수사가 11일 급물살을 탔다. 경찰 수뇌부 체포에 이어 대통령실과 경찰청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도 출범시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경찰 60여명을 투입해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직무실장과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군이 사용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 11시 50분경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며 "법과 이전 정무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목적으로만 간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에 고발돼 출구금지된 상태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장과 김병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할 혐의로 고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 내 국회경비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두 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 청장이 경찰청사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수단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도 출범시켰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나 영장청구권이 없어 수사에 제약이 발생했는데, 이번 공조수사본부 출범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내란범죄尹,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전북 전주 수퍼마켓협동조합 "내란 책임자들 심판대에 세워야"

전북 전주 수퍼마켓협동조합원들은 11일 오전 "윤석열대통령이 탄핵 될 때까지 국민과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고 국민의 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니 있을법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나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여행 위해 국가로 지정해 자국민들에게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을 나라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들의 배신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며 "내란범죄에 가담한 국무위원과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이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될 때까지 추진하라"며, "내란 행위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 전주 수퍼마켓협동조합은 16개 단위 사업장, 3,00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주의 회복 위해 끝없는 투쟁 선언"

한국노총 금속연맹 전북본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의 과거로의 역사 퇴행을 걱정하는 가운데 한국노총 금속연맹 전북본부(본부 의장 염성곤)에서도 11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끝없는 투쟁을 선언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염성곤 의장은 "2024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권력욕에 눈먼 일부 세력들에 의해 또 다시 배신당했다"며,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로 부결된 것은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이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역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이며, 국민의힘과 한덕수·한동훈은 그 공범이다"라고 하며,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했다"고 하며, "이러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절

저히 파괴한 범죄이며,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범죄를 비호하며, 내란 공범으로 스스로의 길을 택했다"며, "국민의 뜻과 정의를 외면한 그들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철저히 저버린 것이다"고도 했다.

염 의장은 "한동훈·한덕수에게 묻는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담화에서 윤석열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마치 자신이 국정을 주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자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다시 일어나 촛불을 들고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맞서야 한다"며, "금속연맹 전북지역본부는 도민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

이명연 도의회 부의장,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감사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문화안전위원회·전주10선거구)이 지난 10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진행된 직능·중소상공인 2024년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그동안 도의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직능경제인의 권리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 부의장은 이전에도 도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금액에 대한 현실화



를 축하하는 5분 발언을 실시하는 등 도내 중·소상공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2024년 예산 1조7635억여원 확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회 결산 추경을 통해 2024년도 예산을 1조 7,635억1,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종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인 1조7,663억1,500만원에 대비 27억 9,900만원(0.16%)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이 계상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 없이 군산시가 제출한 1조7,635억1,6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최종확정됐다.

이날,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3차 본회의 때 조직개편시 전문영역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조직개편을 요청해달라 했음에도 시에서 여전히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셀렉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냐고 성토했고, 김경구 의원도 이에 덧붙여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감제시는 125명, 익산시는 150명인데 군산은 100명도 안되는 인력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농업이 발전하겠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